

오늘 북남공동선언을 교수하고 리행해나가는것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온 겨레는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북남공동선언을 지지 옹호하면서 남조선당국이 하루빨리 공동선언리행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대중적여론을 어느 정도의식해서인지 최근 남조선집권세력의 입에서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발언들이 울려나오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15일 《새누리당》대변인은 논평을 발표하여 《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 남북간 인도적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 등을 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12일에는 통일부 장관 류길재가 서울에서 진행된 한 기념행사에서 6.15공동선언을 《〈정부〉는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오던 남조선집권세력의 입에서 그나마 6.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말이 나온것은 사람들의 귀담을 당기게 하고있다.

문제는 그 말이 과연 진심인가 하는것이다. 속담에도 말보다 더 중요한것은 행동이고 실천이

## 공동선언 《존중》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라고 했다.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이 권력을 다시 켜 이후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그 말이 진심이라고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것이 여론의 객관적인 평가이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공화국이 북남관계문제에서 그 어떤 외세의 압력도 배격하고 7.4공동성명의 첫 조항인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측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외세의존정책이 바뀌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키 리보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발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말로는 《년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광고했지만 규모와 내용, 도발적성격에 있어서 철두철미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었다.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의 강도를 계단식으로 높이는 남측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자주의 정신을 그 첫

함에 새겨놓은 6.15공동선언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기 못할수 있겠는가.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와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한 6.15공동선언의 합의를 공공연히 뒤집어엮으며 《체제통일》을 약탈하게 추구하고있는것도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말과는 판이한 행동이다.

군부와 《정부》기관들이 앞장서서 그 누구의 《금번사태》를 대비한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갱신하고있는가 하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까지 《인권》을 코에 걸고 동족을 핏물어온것이 누구인가.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포괄적으로 내뱉고 《도이칠란드통일이 〈한〉 반도통일의 교본》이라는 황폐빠진 넉두리까지 늘어놓으며 《흙수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있는것이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닌가.

단편적실례이지만 남조선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제기한 민족공동행사개최를 위한 북측위원회의의 실무접촉을 불허하였다. 하여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과 남, 해외가 한데 모여 해마다 성대히 진행되던 민족공동의 통일

행사가 남조선 전 《정권》시기를 이어 이번까지 6년째 진행되지 못하였다.

6.15공동선언발표를 기념하는 공동행사조차 가로막는 그 좁은 속통으로,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주장하는 의로운 사람들과 단체들을 모조리 《총복》으로 몰아 《현대판마녀사냥》극을 펼치는 그 못된 대결심보를 가지고 과연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을 하나로 합치는 거창한 민족사적위업을 어떻게 이루어나가겠다는것인가.

남조선당국자는 자기의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신허프로세스》나 얼마전에 발표한 《드레드넌선언》을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남사이의 《인도적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그가 떠든 북남사이의 《인도적문제해결》로 말하면 이미 6.15공동선언에 천명된 북남사이의 합의내용이다. 6.15공동선언발표 후 2007년까지 16차례 걸쳐 진행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사업을 통해 헤어져 생사조차 모르던 북과 남의 수많은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상봉의 기쁨을 누린 사실은 6.15공동선언리행이 바로 북남사이의 인도적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라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었다. 현 남조선당국이 6.15공

동선언리행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더라면 북남사이의 인도적문제가 벌써 적지 않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올해에 들어와 여러해만에 진행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공화국이 신년사를 통해 6.15공동선언의 핵심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서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때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고 그 관철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서 미국과 야합한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사업이 진행된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 보아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려는 공화국의 자세와 립장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전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내외에 천명한 합의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신허》를 자기의 《전매특허》인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떠들고 있지만 북남사이의 신뢰는 보다

깊이 벌써 14년전에 북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다져나가기로 합의한것이지 결코 새삼스러운 단어가 아닌것이다.

남측당국이 《6.15존중》을 말로만 떠들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전진해온 6.15통일시대의 바통을 그대로 넘겨받아 동족과 손을 잡고 공동선언리행에 나섰더라면 북남사이의 신뢰는 천년거목의 뿌리마냥 깊고도 역세게 다져졌을것이라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6.15통일시대에 북과 남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고 그 토대우에서 서로의 신뢰를 두터이 한 실례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러나 권력을 쥔 남측보수당국은 말로만 《신허》를 떠들었지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했다.

이제는 지나간 일이지만 지난해 남조선당국의 북침전쟁소동과 동족대결책동으로 인해 《6.15의 옥동자》, 북남경제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가 폐쇄직전의 위기까지 처하였던 일을 우리 겨레는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6.15가 열어준 길을 따라 곧 200만명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이 찾았던 민족의 명산 금강산관광도 재개되지 못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모략적인 합

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북남관계전반에 빗장을 꽂은 지른 반북페쇄조치- 《5.24조치》를 만들어놓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대화, 협력의 남북관계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떠드는 《새누리당》의 말에 과연 어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6.15공동선언발표기념일을 맞으며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각층에서 울려나온 《박근혜 〈정부〉가 〈한〉 반도신허프로세스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렇다 할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의 기쁨을 마련하지 못했다.》, 《남북정상과 정부간에 합의한 성명과 선언의 정신을 살리는것만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길》이라는 목소리를 남조선당국은 귀담아 새겨 들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체제통일》의 어려움 앞에서 하루빨리 꺼여나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통일의 날을 앞당겨오는 북남공동선언리행의 길에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어제도 오늘도 레일도 변함없는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며 북남관계개선과 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남조선당국은 대결정책을 버리고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한다면 자기들의 말이 진심이라는것을 실천적인 공동선언리행조치로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전교조를 탄압압살하는 당국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교직원들



## 교육의 민족화를 관도실하는 파썸행위

남조선에서 전교조를 비법화하여 탄압압살하려는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더욱 치솟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19일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퇴직된 9명의 교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여 법원을 내세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로조 통보처분》이라는것을 내려 비법화하는 파썸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을 기다리다가 한듯 남조선의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공무원법에 따른 업무부귀》명령을 내리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법원의 부당한 조치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

이니 뉘니 하며 환승을 지르면서 전교조가 《총복의 심장》이니, 《내부의 적》이니 뉘니 하며 대결광기를 드러내었다.

이것은 신성한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이며 《유신》독재를 퇴살리려는 반민족적 망동이다.

알려진것처럼 전교조는 창립된 후 지난 10여년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력사인식을 주고 나아가서 남조선교육의 민족화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불의가 짓을 짓밟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는 파썸적치를 바로잡고 사회의 정의와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전교조의 이러한 활동은 국

회 의로운 행동으로서 지금도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과 국제사회계의 지지를 받고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범죄시하는 퇴직교사들도 따지고보면 각급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행위들을 바로잡고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들은 전교조를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를 압살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나중에는 《총복》의 딱지까지 붙이다 못해 이번 사건에서 보는것처럼 법원의 판결로 《불법단체》로 락인것이다. 이것은 자라나는 청

소년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는 것도, 민주와 통일의식을 심어주는것도 다 반대하는 보수집권세력의 파썸적인 정체를 드러낸것이다.

민심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당국의 전교조탄압압살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 철 진

### 《유신》독재를 통가하는 극악한 독재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단죄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11일 남조선집권세력의 독재통치를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6.4지방선거이후 박근혜가 선거보조금법을 개정하고 교육감선거제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헤뎀비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결과에 불만을 품은 박근혜가 다음을 선거에서는 야당 특히 통합진보당을 견제하고 《새누리당》이 완전 독판치기를 하게 하려고 이런 음모를 벌리고있다고 까맣했다.

남조선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벌어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19일 미국은 《자국민보호》를 구실로 남조선집정 미군에 고도요격미사일체계를 구성하는 《THAAD》1개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공표했다. 실로 언어도단언이 아닐수 없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도 없고 또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나라도 없다. 또 실사 있다쳐도 그들의 군사적공격으로부터 미국이 《자국민보호》를 하겠다면 제 본토나 주변가까이에서 방어하는것이 군사적전에서서 보아도 옳은 리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국민보호》를 운운하며 제 나라방어 멀리 떨어진 래평양남에 조선반도에 고도요격미사일체계를 배비하겠다는것은 침략자로서의 본성을 가리우려고 동시에 북침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당리당락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는 박근혜의 《제때대로 정치》는 독재정치의 전형적모습이라고 비난하였다.

통합진보당을 없애기 위해 정당해산을 추진하고 나라안보사건을 조작하더니 선거보조금법까지 개정하려 하는 등 박근혜의 히스레리적 망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광기는 과거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통가하는 극악한 독재라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세계가 공인하고있는바와같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는 상대방의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임의의 시각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공격체계이다. 미호전광들은 있지도 않는 《북의 핵,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남조선과 일본을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에 편입

##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요격 미사일배비책동

시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조밀한 미사일방어망을 형성함으로써 미본토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북침선제공격능력을 완성하려고 꾀하고 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미국은 이미전부터 《북의 위협》을 요란스럽게 광고하며 남조선이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에 협력할것을 강요성을 가리우려고 동시에 북침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실 지로 18일 김 판 진

남조선에서 총리후보자로 지명되어 각계층 여론의 못매를 맞으면서도 매집종게 모한 《버티기》에 매달리던 문창국이 보름만에 결국 수칙스럽게도 《자진사퇴》하였다고 한다.

말이 자진사퇴이지 민심의 분노에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

웅장한 귀결이아 놀랄것은 없지만 그는 기고만장하던 허세는 어디로 가고 비맛은 수탈몰이 되어 쫓겨나는 주재에 《법》이니, 《민주주의의 위기》니,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니 뉘니 하고 수작질을 늘어놓은것이다.

문지처참함을 해도 씨원치 않을 미물같은자의 주동이에서 무슨 들을 소리가 있었냐만 이거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 하겠다.

그렇게 《법》과 《민주주의》를 잘 알아서 불법무도한 일제식민지통치와 외세에의

한 민족분열을 정당화하고 특대형인륜범죄인 과거 일본군의 성노예범죄를 정당화했는가. 또 언론의 생명이 진실보도라고 그렇게 말할하는자가 40년동안 언론에 종사하면서 사대매국과 외세의존, 반통일과 동족대결적인 쓰레기글들로 인생을 얼룩지워왔는가 하는것이다.

문창국의 악담질이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극악한

반민족적죄악이기에 일본군의 성노예범죄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이 그를 총리후보자가 아니라 당장 지옥에 처넣어야 한다며 저주와 분노를 표시한것이다.

베지면서도 왜 죽는 지 모르는 미물을 놓고 총리후보로까지 지명한 남조선당국자 또 한 가관이다.

지명한자나 지명당한 미물이나 어쩌면 그 리도 신동망동한지...

서 희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가 24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하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을 반대하는 100만시민행동을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일본이 고노담화를 부정한데 이어 평화헌법까지 고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추진과 재무장의 명분을 주는것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100만시민행동에 펼쳐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단체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 등 제침책동을 막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단체성원들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본사기자

## 사고 왕국

총기란사건을 두고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 누가 피해자가 될지 알수 없이 살아가는 상황》이라고 하며 《우리 공동체가 사고왕국이 아닌가.》라는 아우성까지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에서 당국의 《재발방지》약속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크고작은 사고들이 연발하고 그 도수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있는데 그것은 당연한것이다.

이번 총기란사사고를 놓고 보아도 그렇다. 남조선군부내에서 상급, 녀성의 구타와 폭행, 녀성군인들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하고있어 군기가 문란해지다 못해 심지어 자살사고들까지 일어나고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웃물이 맑아야

이런 대충적여론을 어느 정도의식해서인지 최근 남조선집권세력의 입에서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발언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지금까지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오던 남조선집권세력의 입에서 그나마 6.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말이 나온것은 사람들의 귀담을 당기게 하고있다.

문제는 그 말이 과연 진심인가 하는것이다. 속담에도 말보다 더 중요한것은 행동이고 실천이